

국내 동물복지형 축산의 선구자

전남대학교 수의과학대학 강문일 교수



▲강문일 교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재직 시 축산현장 방문



▲도쿄 일본수의축산대학 할애검사원코스 참석 후 학생들과 함께

지난 연말 발생한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축산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가축질병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보다 확고히 하고, 우리 축산업을 선진화된 모습으로 발전시키고자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기본 밑거름은 동물복지에서 시작된다.

국내에는 아직 '동물복지형 축산'의 개념이 생소하다. 소비자는 물론 정부도 동물복지형 축산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 시절, 일찍이 동물복지에 눈을 뜬 사람이 있다. 바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재임 시 정부 내 처음으로 동물보호 전담 부서를 설립한 전남대학교 수의과학대학 강문일 교수가 그 주인공. 실제 우리 정부는 2006년 3월 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직제개정으로 '동물보호과'가 신설되기 이전까지 정부수립 후 60여 년 동안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공식적인 부서가 없었다. 그가 동물복지형 축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을 당시 재정난으로 위기에 처해있던 '런던동물원'을 동물학대방지협회 및 동물보호관련 NGO들이 캠페인을 벌여 큰 기부금이 모아졌고, 이를 토대로 영국정부도 전향적 유지로 결정, 결국 '런던동물원'은 지금까지 시민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었다. 그는 이 과정 중 동물보호와 관련한 동물보호단체와 영국정부의 소통은 매우 인상 깊었다고 회상한다. 이후 그는 독일과 헝가리에서 초빙교수로 머물면서 틈틈이 정부와 동물보호 NGO들의 활동을 유심히 살피었고 귀국 후 기회 닿는 대로 우리 학계의 동물복지연구는 물론 정부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현재 한국동물복지학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강문일 교수를 만나 국내 동물복지의 현주소 및 오리 선진축산업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주요 과제가 무엇인지 들어보았다.

•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인간과 동물사이에 긍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축산의 핵심이 사육

환경의 수단이 어떠하던 지 이윤추구의 폭을 넓히려는 시각에서 지금부터는 '동물을 중심으로 한 축산환경 조성'을 우선시하는 친환경적이고 친생태학적인 사육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길러 결국 소비하는 가축(동물)들이 사육 과정 중 배고픔, 갈증, 두려움 등을 최소화하고 질병발생 시 적절한 치료와 사육장내 본능적 행동의 발현 등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가축을 기르는 축주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단순 경제성 보다는 축산의 영속성(소비)을 강화할 수 있는 현대축산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처음 동물보호 전담 부서 설립

제가 검역원장으로 부임한 후 정부 내 동물보호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직제개편 시 반영하였고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다행스럽게 '동물보호과'가 탄생되었습니다. 다만 지금도 아쉬운 것은 동물보호 업무는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정책적인 사안이 많아 처음부터 농식품부에서 관장해야 될 업무로 판단하여 추진하였으나 그 당시 정부 부처에 대한 과단위 신설이 묶여 있어 부득불 차선의 선택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조직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동물보호과가 신설되자 이 조직의 활동 근거인 동물보호법에도 현실적인 문제를 담아내어 앞서 언급한 2008년 1월, 동물보호단체와의 다소 마찰이 있었으나 조율과 절충을 통해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비교적 순탄하게 마련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최근 들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에서 농장동물에 대한 정책적 영역을 넓혀 축산 선

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장동물 축산인증제'의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고, 농식품부 동물방역과에도 동물보호계가 신설되는 등 이에 대한 발전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어 저로서는 기쁜 맘뿐입니다.

• 국내 동물복지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동물복지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동물복지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약 5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법의 강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주로 실험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농장동물의 경우, 가축 운송 시 적절한 사료와 물의 공급을 비롯 수송 시 난폭한 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가축의 도살 및 살처분 시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2008년 8월부터는 '동물운송세부규정'을 마련하여 공표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작년말 부터는 동물복지형 농장인증제도의 도입필요성이 거론되었고 그에 따라 그에 대한 법개정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동물복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은 2007년도에 안성시에서 안성맞춤형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조례화시켰고, 올해 들어 전라남도에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육성 인증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민간부에서는 풀무원에서 자체 동물복지 기준을 활용하여 '올가 동물복지인증'이라는 자체 동물복지 마크를 2007. 7월부터 붙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물론 선도적인 축산기업이나 축산물유통업체들은 각각 맡고 있는 영역에 따라 동물복



이달의 인터뷰

전남대학교 수의과학대학 강문일 교수

지적 요소들의 도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과 조광호 교수팀이 2009년도에 수행된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경제성 분석 및 소비자 인식 조사(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응답자의 30%가 동물복지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월평균소득, 식료품비용, 축산식품비용 등이 높일 수록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소비자들은 동물복지형 축산물의 안전성 및 위생수준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고 동물복지측면의 실질적인 개선사항인 사육환경의 안락성이나 균형 잡힌 사료공급 등에는 그 인식이 낮았습니다. 또한 동물복지형 축산물 구매의사를 묻는 조사의 경우 자연적으로 기른 축산물이 건강에 좋기 때문이라는 것과 각종 질병의 발병률을 낮추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선호하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응답결과는 소비자들이 동물복지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형 축산물 구매의사를 나타낸 응답자가 70% 이상이었고, 이들 축산물의 기대가격수준은 일반 축산물보다는 높았으나 닭고기를 제외한 모든 유기축산물에 비해서는 낮은 가격을 희망하였습니다.

한편, 실제 양축농가들의 동물복지 인식도에서도 축종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동물복지는 사양관리상 추가비용이 드는 등을 고려하여 도입의사가 평균 50% 남짓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소비자나 생산자가 모두 동물복지에 대한 의의나 중요성을 앞으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 국내 실정에 맞는 동물복지 축산

현재 정부는 돼지에 대한 동물복지 사육가이드라인 개발을 완료하여 그에 대한 야외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산란계에 대한 사육가이드라인을 비롯 향후 한우와 육우, 육계와 오리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축종에 따라 동물복지 요소를 도입해야 할 시설에 차이가 있지만 예컨대 산란계의 경우 좁은 다단계 케이지가 개방식으로 한다면 임신돈의 분만틀사육을 군사사육 등 다른 대체사육 시설을 마련한다면 또는 축종별 혹은 체중별 적정 사육공간이나 운동장의 확보 등은 동물복지형 축산을 지양하는데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리사육장의 경우를 보면 친환경 동물복지형 오리 축사 모델개발을 기본으로, 균형잡힌 사료의 공급, 일령별 적정 사육공간을 물론 충분한 음수 니플이나 사료공급기의 설치, 질병에 걸린 오리의 효과적인 치료나 폐사된 오리의 신속한 제거, 깔집의 적정관리 등을 감안하여 사육한다면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오리고기를 생산하는데 이상적인 조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리의 입식과 출하시의 운송과정도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동물복지형 관리가 인간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조건을 한꺼번에 우리의 사육환경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정부도 가장 동물복지형 도입이 시급한 축종부터 사육표준기준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외국에서 조사한 동물복지 개선이 필요한 축종순위를 보면 산란계가 44%로 가장 높았고,

육계가 42%, 돼지가 20%, 육우가 17%, 송아지가 14%, 그리고 오리과 거위가 11% 순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우리나라의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동물복지형의 도입필요성이 더 높아지리라는 것이 기우이길 바랄 뿐입니다. 물론, 우리 오리산업도 동물복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 선진축산업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

농식품부의 축산업 선진화 내용을 보면 오는 6월부터 오리를 포함한 소, 돼지, 닭 등에 대한 사육농장의 적정사육 기준과 허가기준 두수를 정하고 매년 그 사육두수를 점차 낮춰감으로서 질병예찰의 사각지대를 좁혀 가게 될 것입니다.

선진 오리산업이란 오리농장의 사육환경과 시설이 최적화하고 좋은 씨오리농장부터 실용오리 농장까지 생산체계가 계열화되고 한국형 사양표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발하면서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약품소비와 관리비용은 낮추면서 오리고기 소비시장을 지속적으로 국내외로 확대시키기 위한 사육관리와 성장 능력을 가지는 것이라 정의해 봅니다.

이러한 견해는 지극히 이상적이고 오늘날 오리농장의 현실에 대비해 볼 때 꿈이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오리산업의 기반구축과 발전에 대한 높은 애정과 책임을 가진 주인의식 즉 전문직업인 의식을 지닌 오리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실로 여러분들의 오리관련 일터에서 속히 구현될 것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창출은 '단순사육관리인' 보다도 오리사육에 대한 최신 사육정보에 메달라하는 지적 욕구와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꾀하려는 진취

적인 실천력을 겸비한 '오리사육전문가' 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리농장들이 생산에서 식탁까지라는 구호를 과학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해습(HACCP)을 기본으로 인증받고 거기에 더해 친환경 및 친동물복지형의 개념을 점진적으로 제 때 도입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은 물론 소비자에 대한 오리산물의 좋은 이미지 제고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거론하고 있는 '동물복지형 오리농장'의 도입이 현재 오리농장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소망하는 것처럼 오리사육이 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더욱이 지속적 산업으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물복지형 오리농장'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타이밍' 이 언제인 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때' 가 왔다는 것입니다.

• 한국동물복지학회에서는...

우리 학회는 동물복지에 대한 짧은 역사를 대변하듯 10여년 전에 출발하였습니다. 한국동물복지학회의 지양하는 꿈은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삶'에 있고 이를 위한 각종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오리인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동물의 산업현장(농장동물, 반려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오픈되어 있고, 동물복지에 관심 있는 학계와 사업장 및 NGO들에게도 문호가 열려져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회의 활동범위는 한국형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 등 동물보호법과 관련한 정책개발, 동물복지인프라 구축과 과학적 동물복지 평가에 대한 연구, 유기견발생방지를 비롯한 동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이달의 인터뷰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강문일 교수

등을 통해 동물복지선진국을 통해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국격을 높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제역 발생과 더불어 대두된 살처분에 대한 현안 등 여러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려 애쓰고 있고 이와 함께 동물복지 분야에 대한 상담네트워킹을 구축하여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동물복지 정착을 도와주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는 이러한 폭넓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지원 부서를 두고 있는데 인간과 동물유대 연구회를 비롯 농장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복지자격인증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리산업의 동물복지 개념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학회가 도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 오리산업에 한 말씀

무엇보다도 오리인들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자부심아래 정부의 정책대상으로서의 오리관련 산업으로 발전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리관련 사업체들이 ‘산업’으로서의 각자의 역할과 목표를 확실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나 지자체에 오리가 산업적으로 인식받는 데는 성공적이었으나 오리고기의 최종소비자들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해외약성전염병이 발생 후 국민들의 세금으로 개인사업장에 대한 각종 보상을 하고 있는 현재의 강력한 지원을 계속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국가재난성질병으로 불린 구제역 발생에 따른 천문학적 피해에 대해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모두 보상하는데 얼마나 공감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측하건대 정부의 축산분야 해외약성전염병들

을 막기 위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활동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동시에 농장단위별 차단방역의 미흡이나 질병전파에 대한 책임도 역시 강화될 것이고 그에 따른 보조금 성격의 지원도 점점 축소될 것으로 짐작됩니다.

따라서, 현재 오리생산과 도압, 가공, 판매가 몇몇 주체들에 의해 계열화되어 있는 오리산업은 이러한 정책 및 국민의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계열화 주체들이 오리사육농장에 대한 새끼오리 공급의 입식조건에 필요에 따라 용도가 시시때때로 바뀌거나 위생을 언급하기 곤란한 불법축사는 제한하거나 종오리장이나 부화장 혹은 실용오리농장 등에 대한 자체 위생관리수준을 만들어 인센티브를 확실히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견해가 현장을 모르는 시각이라 비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동물복지라는 현재 축산업의 가장 높은 수준의 사육, 도축, 운송 등의 관리수준을 우리 오리산업에 적용하려면 지금 오리사육 현장에 대한 보다 더 근본적인 사육조건들을 개선하지 않고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복지의 오리산업내 정착의 성패는 바로 동물복지형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입니다.

즉 동물복지형 사육으로 생산한 오리고기에 대한 적절한 이윤이 포함된 판매가격에 소비자들이 기꺼이 구매하는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리협회가 지금부터라도 동물복지형 오리농장에 대한 꿈을 오리인들과 소비자들에게 교육과 홍보프로그램을 통해 시작하는 때가 지금이라 여깁니다.

여러분이 종사하는 오리관련 사업체가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지식을 지닌 소비자들이 방문했을 때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